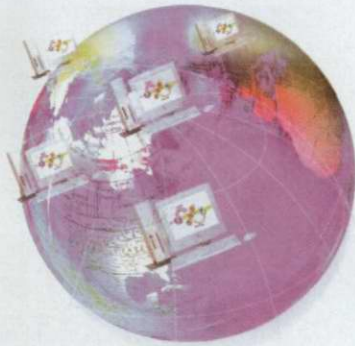


#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의 방향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해 폭넓은 국가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동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장

**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거래를 한다는 개념으로 수·발주, 물품구입, 판매, 광고 등과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교환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정보화시대에 정보기술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상거래 행위를 통해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의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을 사업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마케팅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표 1>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이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97년 7월 1일 국제적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으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EU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다 1997년 7월 6~8일 독일 본에서 '범세계 정보망(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본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의 주도와 다른 국가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가 향후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무관세화, 내국세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암호화 기술 공개, 내용물(Content) 관련 규제 등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자국 이익확보 차원에서 견해

<표 1>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와의 비교

구분	전자상거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
유통채널	기업-소비자	기업-도매상-소매상-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전세계	일부지역
거래시간	24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고객수요파악	온라인으로 수시획득	영업사원이 획득
마케팅활동	재입력이 필요없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재입력 필요
고객 대응	생방향통신을 통한 1:1 인터랙티브 마케팅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
판매 거점	요구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요구 포착이 어렵고 대응지연
	사이버스페이스	판매공간필요



(그림)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 체계

차이가 상당하므로 향후 국제적 합의에 이르는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 합의 도출과 기술적인 선결과제가 산재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국제적 논의 진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국가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각국의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

#### 미국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와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의 발표와 아이러 매거지너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정보기술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워낙 방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이러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의 이동근 과장을 만나 보았다. <취재/ 조광현 기자, 사진/ 이규정 기자>

최근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일단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를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매체정보 등 물리적 상품이 아닌 상품을 무관세

화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품은 과세기술이나 과세원리의 측면에서도 관세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원칙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있다.

미국은 1993년 10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연방 조달효율화(Streamlining Procurement through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업무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19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진원센터(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1996년 12월 부터는 백악관의 수석자문인 아이러 매거지너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팀은 전자상거래 청사진으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7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는 5개의 기본원칙과 9개분야로 구분하여 미국의 추진전략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정책은 12개 부처로 구성된 FECAT(Fede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 표준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상무부산하 국가표준기술원(NIST), 국방부 및 국제청 등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미국에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서비스 상품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상품에 있어서도 무관세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일단 정부측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갈 것인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일본이나 EU 등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중진국의 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재정의 10% 내외를 관세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이득에 대한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만, 싱가포르 등 국내의 상황과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무관세화뿐 아니라 내국세 금지에 대한 것도 있다. 즉 인터넷 거래의 경우 기존의 상품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따랐던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를 면세하지는 것인데 여기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세가지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립하고 있

다. 첫째, 국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도아래 법,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 국내 전자상거래 수요확충을 위해 정부조달, 국방, 건설부문을 전자상거래화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에 치중할 것이다.

☞ CALS/EDI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으로는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소핑몰 등은 특별한 규제나 육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CAL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은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전자상거래가 워낙 복합적인 것이어서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직이나 기능면에서

서만 4,600만명의 소비자가 1인당 연간 350달러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 진흥협회(E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중이다. 제1차

사업으로 100억엔을 투입하여 1996년 4월부터 'EC 추진사업-기업·소비자간의 EC 실증프로젝트'로 1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는 350개 이상의 기업과 5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또 '기업간 고도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으로 217억 5천만엔 규모의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정보화추진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EDI 표준개발과 보급을 추진중에 있다.

우정성은 1995년 10월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를 설립해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성은 올해 1월 컴퓨터망을 통한



중복되는 사항도 적지 않지만 차후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전자상거래 기본법 입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전자상거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을 통일규범으로 정해 2001년부터 운영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UN의 모델법인 UNCITRAL을 토대로 준비중에 있으나 모델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직은 체계가 희박하다. 통산부차원에서 연말쯤 이 법의 초안이 완성될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상

정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응은

일단 국내 정보화 수준은 그리 뒤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보안, 암호화 기술이 미비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고,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사회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프라의 미비 역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적지않은 문제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규제나 특정한 부문의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전자상거래를 민간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빠른 대응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대외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국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래보호를 위해 연내에 전자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부문에서도 기업 스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EU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민간기업들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광대역통신망인 범유럽정보망(Trans-European Network)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에는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을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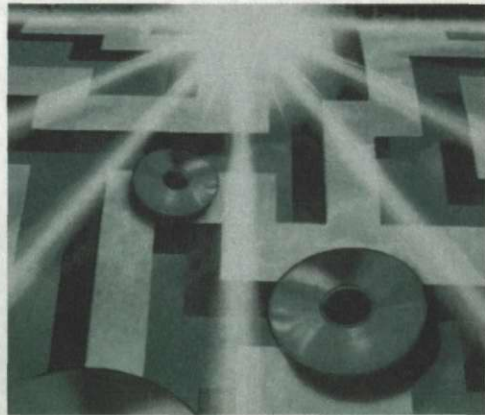
올해 4월에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역내 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4대 분야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세계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이 본 선언(Bohn Declaration)은 EU를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입장을 밝힌 것으로 무관세화 및 내국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은 유보된 상태이다.

EU의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들은 몬텍사사가 추진하는 IC 카드는 이용한 서비스, 디지캐시의 E 캐시, 전자지갑을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CAFE(Conditional Access For Europe) 등이 있다.

## 기타

싱가폴은 일종의 정보화 추진위원회인 NCB(National Computer Board)의 주관아래 4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12개의 은행과 30여개의 유통업체,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홍콩의 이온(AEON)사는 IBM, 미쓰비시와 공동으로 인터넷 몰을 만들어 상품판매에서 가정배달까지 하고 있다.

##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정부간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의 시장 지향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적 입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홈쇼핑, 오락물 등의 소비적인 전자상거래 보다는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논의의 중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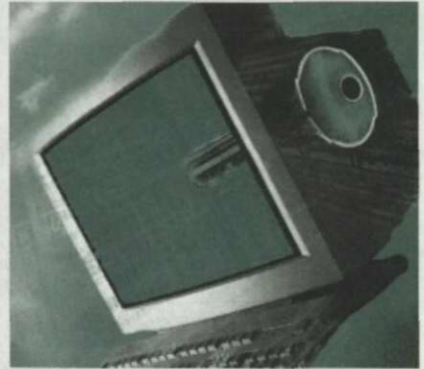
### 국내기반 구축

#### • 법적기반 구축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1996년 5월 제정한 모델법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기본법'의 제정을 통산부에서 준비중에 있다. 이 전자상거래 기본법에는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메시지의 법적효력, 전자서명, 인증, 보안, 개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1998년 입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재경원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자금이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전자자금이체법에는 전자자금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 이체거래 파오와 은행의 책임 등을 규율하게 될 것이다. 역시 1998년 입법 추진하게 될 것이다.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3개기관으로 시작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2000년까지 20개기관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센터에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산업기술자금으로 20억원을 지원했다.

• 국내 수요기반 확충

조달 EDI, 국방 CALS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제공으로 공공부문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검증하여 전자상거래의 민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외자, 경리, 비축 등 조달 업무 전반에 대한 EDI시스템을 2만 2천여개의 수요기관 및 1만 4천개의 조달업체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2001년부터 정부조달 업무를 전자거래화 할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국방 CALS는 1999년 7월까지 128종의 정형

화된 EDI 표준문서 및 규격서 등을 개발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군내부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분야에도 CALS를 도입할 경우 정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건설공사의 설계, 자재공급,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까지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공유, 연계체제를 구축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지방 국토관리청 발주공사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05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수주액 193조원의 14%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요소기술 개발

통산부, 정통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인 보안, 인증, 암호화, 전자서명 등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학연 공동개발, 민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개발 확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외 기업과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아태정보통신인프라(APII) 적용추진을 위한 암호화, 안전장치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기술자금(통산부) 및 정보화촉진기금(정통부)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100억원 지원). **DC**

〈표 2〉 거래방식에 따른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거래방식	1994	2000년	2005년
전통직방식	5,150,000	8,500,000	12,000,000
전자상거래			
인터넷	-	600,000	1,200,000
총규모	245	1,650,000	2,950,000

자료 : Killen & Associates